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역할과 의의

미래사회전략 수립을 위한 국가적 정책 플랫폼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간사)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공공투자 자원



정책의 시계를 넓히다,
장기 전략
거버넌스로의 전환



AI·반도체·바이오,
미래 산업 로드맵을
설계하다



민관 협력으로
미래를 논의하는
국가 정책 플랫폼



최근 한국경제는 기술 혁신의 가속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등 다양한 구조적 전환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확산은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는 경제 성장과 재정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처럼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의 시계를 보다 길게 설정하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기획예산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국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 기술혁신, 인구구조 전환, 기후 변화 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의미는 매우 크다.

장기 전략의 필요성

최근 정책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의 속도와 불확실성이다. 글로벌 기술 경쟁과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의 확산은 산업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국가 정책 역시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변화의 방향을 전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전략은 단순히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고 국가 발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012년 출범 이후의 발전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로 설치되었다. 당시 우리 사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구조 변화와 인구구조 전환 등 장기적인 정책 과제를 마주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기수를 거치며 경제·사회 구조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의제를 논의해 왔다.

중장기전략위원회 연혁

- **1기(2012~2013)** : 위원회 출범 및 국가 중장기 정책과제 논의 시작
- **2~3기(2014~2017)** : 인구구조 변화, 성장잠재력 확충, 미래 산업 전략 등 중장기 정책 의제 발굴
- **4~5기(2018~2023)** :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 사회구조 변화 등 미래 정책 과제 논의 확대
- **6~7기(2023~현재)** : 산업·기술 변화와 인구·기후 등 복합적 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사회 전략 논의

이와 같이 위원회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정책 의제를 확장하며 장기 정책 논의를 지속해 왔다.

최근 위원회 활동과 정책 논의

최근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국가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주요 목표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위원회 논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들이 주요 정책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분과회의와 정책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혁신성장과 미래 산업 전략

중장기 전략 논의에서 핵심 축은 여전히 혁신 성장이지만, 이제 그 의미는 단순한 성장동력 확보를 넘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빠른 추격(catch-up)을 통해 세계적 제조 강국으로 도약했으나, 최근에는 성장잠재력 둔화와 산업 역동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오늘날 산업 경쟁의 본질은 모방과 효율이 아니라 설계와 창조, 그리고 선도적 규칙 설정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에서는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만으로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first mover)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투자 확대가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에 있다. 과거의 성장 모델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제도 위에서 작동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실패를 최소화하는 데에는 유리했지만, 도전과 창조를 요구하는 선도형 경제에는 오히려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관리·통제 중심의 제도에서 창의·도전 중심의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

확한 로드맵 수립이다. AI,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전환, 콘텐츠 산업 등 핵심 분야에 대해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기술개발-인재양성-산업생태계-규제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략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둘째, 장기적 시각에서의 지속적인 R&D 투자이다. 선도형 기술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다. 따라서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는 혁신을 지속하기 어렵다. 정부와 민간 모두 긴 호흡의 투자 구조를 구축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공공 R&D는 전략적 방향성을 갖고 민간 혁신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혁신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편이다. 인재, 자본, 기업, 연구기관 간의 연계가 강화된 개방형 혁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분절된 구조에서는 기술 상용화와 산업 확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혁신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설계와 실행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혁신성장은 단순한 정책 분야가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과제이다. “1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지킬 수는 없다”는 지적처럼, 이미 확보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존의 성장 공식은 쉽게 무력화되며,昨天的 1등이 오늘 흔들리는 상황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결국 혁신성장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키워내는 제도와 시스템의 경쟁력에 있으며, 이는 중장기 전략 논의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정책의 시계를 넓히는 거버넌스

미래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책의 시간축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기술 변화, 인구구조 전환, 기후 대응,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은 모두 장기 과제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 성과 중심의 정책 접근을 넘어서는 거버넌스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정책 및 제도 환경은 그동안 추격형 경제에 최적화되어 왔으나, 효율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제도와 단기 성과 중심 체계는 현재의 불확실성과 기술 전환 시대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선도형 경제에 부합하는 정책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제도 중심의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사·평가·규제·노동 등 정책 환경 전반을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의 수용성과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첨단산업의 속도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과 규제 혁신,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 설정과 결단이 가능한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정책의 시계를 넓히고 국가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의 지혜를 결집한 장기적 논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미래 사회 전략을 모색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장기 과제에 대응하는 정책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